

2018년 지방직 공무원 7급 행정학 a책형

(2018.10.13. 시행)

조철현 쉬운 행정학

0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 ① 행정안전부
- ② 국회사무처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④ 법원행정처

[답] ①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아닌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0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 ④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답] ②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연공서열중심의 인사관리를 타파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중시하는 제도이다.

03.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 ②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
- ③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 ④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답] ④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도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이 아니라 하나의 특징에 해당한다.

0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 ②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③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답] ②

19세기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20세기 행정국가로 이행되면서 행정의 복잡화, 전문화로 인한 외부통제의 한계로 인해 행정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오답]

- ① 도의적 책임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 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 ③ 대응적 책임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을 행사한다. 직무감찰은 감사원이,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사하는 것으로 내부통제 수단에 해당한다.

05.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 ②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 ③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답] ④

균형성과표는 조직 전반의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이다.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하는 것은 균형성과표가 아닌 MBO에 해당한다.

06.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중화 경향-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 ② 관대화 경향-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 ③ 총계적 오류-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 ④ 시간적 오류-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답] ③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은 규칙적 오류라고 한다. 총계적 오류는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0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답] ③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1항 :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 도의 사무로서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오답]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5조 1항 : 제 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9조 2항 :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 :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 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답] ④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의 선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 78조의 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09.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 ②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 ③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 ④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답] ③

G2G(Government, Government)는 정부내부의 전자서비스를 의미한다. G2G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오답]

- ① G2G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증진될 수 있다.
- ② G2C는 일반국민을 위한 전자 서비스로 G2C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진다.
- ④ G2B는 기업활동을 위한 전자 서비스로 G2B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 조달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10. 덴하트와 덴하트(J. V. Denhardt & 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②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 ③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 ④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답] ①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11.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 ②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답] ③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 예산제도는 영기준 예산제도(ZBB)이다.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상향적 예산제도로서 재정팽창을 야기할 수 있다.

12.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 ②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 ③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 ④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답] ③

BTO가 아닌 BTL에 대한 설명이다. BTL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건설 후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민간에서 부담한다.

13.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②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 ③ 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답] ②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스피드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규모의 경제’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함께 추구한 방식이다.

14.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 ② 프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답]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7년 중앙정부에, 2008년 지방정부에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정책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이것을 성과평가와 연계한 예산제도이다.

15.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및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 ②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 ③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 ④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적 목표다.

[답] ②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은 목표의 승계이다. 목표의 전환은 조직이 추구한 종국적인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으로 바뀌는 현상을 의미한다.

16.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유형)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구성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 - 기계적 관료제 구조
- ② 핵심운영(operating core) - 전문적 관료제 구조
- ③ 중간계선(middle line) - 사업부제 구조
- ④ 지원참모(support staff) - 애드호크라시(adhocracy)

[답] ①

기계적 관료제 구조에서는 기술구조부분이 강조된다. 전략적 정점이 강조되는 조직구조는 단순구조이다.

17.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답] ③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진입규제, 생산량규제, 가격규제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경제적 규제 중에서 진입규제와 특히 관련되며 진입규제는 행정법상 특허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제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이 아니라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하게 된다.

18.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 ②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 ③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shock)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 ④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답] ①

자연실험은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을 의미한다.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인위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자연실험은

진실험이 아닌 준실험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19.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 ②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 ③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답] ②

공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숙의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표본 집단을 구성한 뒤, 참가자들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및 토론을 거친 뒤 의견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비해 참가자의 수가 제한되고, 이러한 참가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20.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A ~ D)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	배제성	비배제성
	A	B
비경합성	C	D

- | | | | | |
|---|-----|----------|------|--------|
| | A | B | C | D |
| ① | 구두 | 해저광물 | 고속도로 | 등대 |
| ② | 라면 | 출근길 시내도로 | 일기예보 | 상하수도 |
| ③ | 자동차 | 공공낚시터 | 국방 | 무료TV방송 |
| ④ | 냉장고 | 케이블TV | 목초지 | 외교 |

[답] ①

구두, 라면, 자동차, 냉장고는 모두 사적재에 해당한다.

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	배제성	비배제성
	A - 사적재(시장재)	B - 공유재
비경합성	C - 요금재	D - 공공재

[오답]

- ② 해저광물, 공공납시터, 출근길 시내도로는 공유재에 해당한다. 케이블TV는 요금재이다.
- ③ 고속도로는 요금재이다. 일기예보, 국방 등은 공공재에 해당하며, 목초지는 공유재이다.
- ④ 등대는 공공재에 해당한다. 상하수도는 요금재이며, 무료TV, 외교 등은 공공재이다.